

지방분권 시대, 이탈(Exit)인가 충성(Loyalty)인가 : 정주환경 및 지역격차 인식이 김해시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Exit or Loyalty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 The Effects of Settlement Environment and Regional Disparity Perception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Gimhae Residents

오 정 민**·이 상 협***

Jeong Min Oh·Sang Hyeb Lee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자치 30년 동안 제도적 분권은 진전되었으나 주민의 정주 기반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역소멸 대응에서 외부 인구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곳에 사는 주민이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의 문제다. 이에 본 연구는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정주환경 인식과 지역격차 인식이 정주의식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주환경 인식은 지역 내부 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지역격차 인식은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열위감으로 개념화하였다. 김해시민 700명의 설문 응답을 대상으로, 두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조절효과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PROCESS Macro(Model 1)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주거·생활, 안전·방재, 소득·일자리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주의식이 높아졌으며, 지역격차 인식 중에서는 인접 도시와의 격차 인식만이 정주의식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또한

* 「2025 지역정주 가치정향 모니터링」 데이터를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인제대학교 글로벌대학사업본부에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인제대학교 연구교수

***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논문 접수일: 2026. 8. 12. 심사기간: 2026. 8. 12. ~ 2026. 9. 14. 게재확정일: 2026. 9. 14.

소득·일자리 환경 인식과 창원 대비 격차 인식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으나, 다중검정 보정 이후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확정적 결론보다는 탐색적 수준에서 신중하게 해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정주의식이 지역 내부 여건에 대한 평가와 인접 도시와의 상대적 비교 모두와 관련됨을 보여주며, 지역소멸 대응에서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격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방분권, 정주의식, 정주환경, 지역격차 인식, 조절효과

Over three decade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institutional autonomy has advanced, yet the settlement foundation of local communities has weakened. This study examines how settlement environment perception and regional disparity perception shape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Gimhae residents, based on survey responses (N=700)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d the PROCESS Macro. Settlement environment perception refers to residents' evaluation of internal local conditions, and regional disparity perception to the sense of relative disadvantage form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The analysis shows that more favorable evaluations of housing, safety, and employment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stronger settlement consciousness, whereas, among the disparity perceptions, only the perceived gap with neighboring cities significantly lowered it.

The interaction between income and employment conditions and perceived disparity with Changw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fore correction but not after correction for multiple testing; it was therefore treated as exploratory.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 that settlement consciousness is associated with both evaluations of local conditions and perceived disparities with neighboring cities, suggesting that policies addressing regional decline should consider both dimensions.

□ Keywords: Era of Decentralization, Settlement Consciousness, Settlement Environment, Regional Disparity Perception, Moderation Effects

I. 서론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30년이 경과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는 꾸준히 진전되었으나, 그 실질적 기반인 지역주민의 정주는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 8. 21.).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5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관심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이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방증이다(행정안전부, 2025. 12. 31.).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지역 인구의 양적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규모와 구조, 가구 구성의 변화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Tiebout, 1956). 게다가 이는 특정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인구 감소라는 대전환 속에서 전개되고 있어 파장이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에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인구를 데려오는 대응은 근본적 한계를 지니며, 지금 그곳에 사는 주민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은 여전히 외부 인구 유치 경쟁에 집중되어 있다(김상민·이성원, 2025). 그 결과 기존 주민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진단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정작 이들의 역외 유출을 막는 것 역시 한계를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 대한 불만이 참여와 변화 요구로 전환되지 못할 때 주민은 결국 그 지역을 떠나는 선택으로 대응하며(Hirschman, 1970), 참여의 주체가 떠나는 것은 곧 지역 자치의 실질적 기반이 침식되는 과정이다. 지역이탈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떠난 자리를 새로운 인구로 채워도 균열은 반복된다. 따라서 기존 거주민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존립을 위한 핵심 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주의식(settlement consciousness) 결정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그동안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안전 등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강영웅·이승중·이혜림, 2020; 이미애·이승중, 2016; 이희창 외, 2004), 최근에는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 같은 비물질적 요인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도 부각되고 있다(오정민·이상협, 2025). 그러나 이들 연구는 ‘우리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가’라는 절대적 평가에 집중해 왔으며, 주민의 정주 판단이 지역 내부 조건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조건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준거집단과의 다양한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강혜자, 2016; Festinger, 1954). 따라서 정주 및 이주 결정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열망, 비교 준거, 이동 역량이 결합된 복합적 판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Carling, 2024), 지역 이탈 역시 절대적인 정주 여건 못지않게 비교에서 비롯되는 인지적 격차와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박준식·김영범, 2013; Stark & Taylor, 1989).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최근에는 타 지역과의 격차 인식을 정주 결정의 독립적 요인으로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하였으며, 격차 인식이 심화할수록 이탈 충동이 강해진다는 사실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김상민·이성원, 2025; 김현석·한석민, 2024). 그럼에도 이들 연구는 격차 인식의 직접 효과를 밝히는 데 머물러 있으며, 정주 환경 인식과 정주의식 간의 관계를 조건부로 변화시키는 내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를 검토하기에 적합한 사례가 경상남도 김해시다. 김해시는 약 56만 명이 거주하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정주인구 100만 명 규모의 창원특례시 및 330만 여명의 부산광역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일상적으로 인접 도시와의 격차를 체감하는 입지적 특성을 지닌다. 이때 주민이 체감하는 격차는 창원·부산과의 직접적 비교에 국한되지 않고, 멀리는 수도권과의 격차부터 가까이는 지역 내부의 불균등까지 준거의 공간적 위계에 따라 여러 층위로 나뉜다. 김해시의 이러한 구조적 맥락은 정주환경에 대한 절대적 인식과 별개로 상대적 격차 인식이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정주환경 인식과 지역격차 인식은 각각 정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격차 인식은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를 규명함으로써,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민 정주 행동의 심리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이 자치의 실질적 주체로 남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지역정주: 이탈(Exit)과 충성(Loyalty)

지역을 떠나거나 머무는 행위는 단순 공간 이동의 문제가 아니다. Hirschman(1970)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불만이 축적될 때 구성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이탈(Exit), 발언(Voice), 충성(Loyalty)의 세 경로로 유형화하였다.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이 세 경로는 각각 이주(移住), 지역 내 참여와 변화 요구, 정주(定住)를 읽어내는 분석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세 경로는 배타적이거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 맞물린 연속적 반응에 가깝다. 불만에 직면한 주민은 곧바로 이탈하기보다 애착과 결속이 남아 있는 한 먼저 발언을 통해 개선을 시도하며,

그 발언이 좌절되고 결속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이탈로 이행한다(Farrell, 1983; Rusbult et al., 1988). 이러한 이해는 지역 불만족이 곧 이주로 직결된다는 단선적 시각을 넘어, 정주 판단을 여러 경로가 교차하는 동태적 과정으로 바라보게 한다. 본 연구가 정주의식을 이탈과 충성의 양극 사이에 놓인 연속 지표로 조작화한 것도, 주민의 대응이 어느 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이 경로들 위에서 이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충성은 단순한 물리적 잔류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심리적 결속에 기반한 적극적인 머무름이다(Hirschman, 1970).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교육·복지·일자리·안전 등 정주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역에 대한 심리적 결속을 강화하고, 이탈보다 발언과 참여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조건이 된다(강영웅 외, 2020; 이미애·이승중, 2016; 이희창 외, 2004; Tiebout, 1956). 이러한 맥락에서 정주환경 인식은 충성을 유지시키는 지역 내부의 인력(引力)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이탈은 불만이 발언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심리적 결속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대응이다(Clark et al., 2017; Hirschman, 1970). 이러한 이탈 충동은 지역 내부 조건에 대한 절대적 불만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비교 준거 대비 상대적 열위에서 오는 박탈감에 의해 더욱 심화되며(Stark & Taylor, 1989), 박탈감은 그 자체로 이탈을 촉발하는 독립적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김상민·이성원, 2025). 이러한 점에서 지역격차 인식은 정주환경 인식이 형성하는 충성의 인력에 맞서는 외부 비교의 척력(斥力)으로 작동할 수 있다(박준식·김영범, 2013).

문제는 이러한 이탈이 누적될 경우 지역 전체의 구조적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찾아 떠나는 흐름은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생산인구와 경제활력의 지속적 상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동남권 인구 감소의 상당 부분은 역외 유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노동시장 위축과 세수 기반 약화, 공공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한국은행, 2023; 김현석·한석민, 2024). 그 결과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이 둔화되고 남은 주민의 정주 조건마저 열악해지고 있다(김민석·강민규, 2023). 지역소멸 위기를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재생산 능력의 점진적 붕괴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상대적 박탈이 곧바로 이탈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충성은 불만이 즉각적 이탈로 전환되는 것을 지연시키며, 이 국면에서 지역에 대한 불만족은 이주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유대나 애착을 통해 이주 대신 지역에 적응하는 경로를 택하는 경우도 확인된다(오정민·이상협, 2025; Bach & Smith, 1977).

2. 정주의식과 정주환경

1) 정주의식

정주의식(settlement consciousness)은 지역에 대한 심리적 결속이 구체화된 개념이다(이희창 외, 2004; Chen et al., 2019). 정주(定住)가 물리적 거주 사실을 넘어 특정 지역에서 삶의 토대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면(국립국어원, 2025), 정주의식은 그 상태를 지탱하는 내적 기반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자산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주관적 만족감,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머무르려는 의향이 결합된 복합적 구성개념으로 정의된다(강영웅 외, 2020; 오정민·이상협, 2025; 이희창 외, 2004).

정주의식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의 강도를 포착하는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이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적 판단에 가까운 거주 만족도(residential satisfaction)와 구별된다(Lewicka, 2011).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평가, 미래의 거주 의향이 하나의 심리적 지향으로 통합된 동태적 개념으로서, 지역 귀속감·지역 만족도·거주 지속 의향 등을 통해 측정된다(강영웅 외, 2020; 오정민·이상협, 2025; 이미애·이승중, 2016; Hofstede et al., 2023). 앞서 논의한 이탈과 충성은 Hirschman(1970)의 틀에서 불만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경로이지만, 본 연구는 이를 정주 맥락에 적용하여 정주의식이라는 하나의 연속 척도로 조작화한다. 다만 정주의식을 충성 자체와 동일시하기보다, 지역애착과 지속 거주 의향을 통해 충성 성향에 근접하는 심리적 지표로 설정한 것이다. 정주의식이 높을수록 충성 성향에, 낮을수록 이탈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되, 이를 실제 잔류나 이주 행동과 곧바로 등치하지는 않는다. 즉 실제 전출 여부를 별도로 관측하는 대신, 정주의식 수준을 통해 주민이 이탈과 충성 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다. 결국 정주의식 수준은 주민이 지역을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를 가르는 심리적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정주의식은 지역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가늠하는 정책 지표이며, 본 연구는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심화와 인구 감소 문제의 가시화를 배경으로 정주의식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연구들은 주거 환경,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 정주환경의 조건과 정주의식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으며(이미애·이승중, 2016; 이희창 외, 2004), 이후 연구들은 분석 대상을 청년, 귀농·귀촌 인구, 외국인 주민 등으로 세분화하거나(우영옥, 2023; 진금주, 2022), 조절·매개 변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강영웅 외, 2020; 오정민·이상협, 2025; 정영아·김윤지, 2022). 정주의식이 주민의 개별 특성과 지역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주의식 연구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다만 각 요인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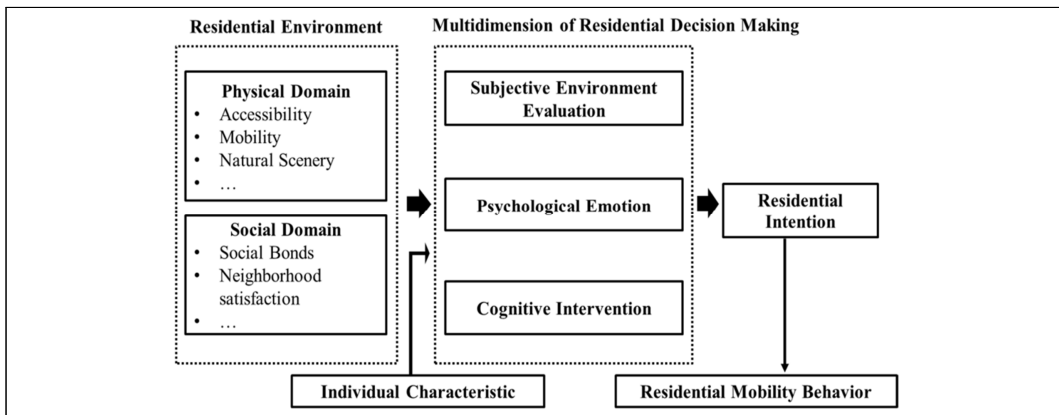
영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데 머무른 탓에, 이들이 서로 맞물려 정주의식을 좌우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어떤 인식이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어떤 인식이 이를 약화시키며, 그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2) 정주환경 인식

주민이 지역에 머무는 결정은 그 지역이 삶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이희창 외, 2004). 이 신뢰의 대상이 바로 정주환경(settlement environment)으로,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조건의 총체를 의미한다. Tiebout(1956)는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와 생활 여건을 제공하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를 통해 지방정부 간 경쟁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 논리는 지역 단위의 생활 조건이 정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연구들은 주민이 이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가에 주목하였으며,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 형성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이미애·이승중, 2016; 최일진·남황우, 2015).

특히 An, Aoki & Suzuki(2021)는 Amerigo & Aragones(1997)의 정주 만족 모형을 수정·확장하여, 물리적·사회적 정주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평가, 심리적 감정, 인지적 간섭을 거쳐 정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이 모형에 따르면 정주환경 인식은 단순한 조건 평가가 아니라, 주민이 장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와 만족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정주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현 지역에서 삶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지며(이희창 외, 2004), 이러한 평가가 정주 결정을 매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림 1〉 정주 의사결정 통합모형



출처: An, Aoki, & Suzuki(2021: 5)

본 연구의 관심은 지역 내부 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과 맺는 관계가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형성되는 지역격차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있다. 이에 정주환경 인식은 현 거주지역의 생활 여건에 대한 평가로, 지역격차 인식은 비교 준거에 대한 상대적 열위 인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통상적으로 정주환경은 주거와 생활편의, 교육·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안전과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소득과 일자리 기반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삶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조건을 포괄한다(강영웅 외, 2020; 이미애·이승중, 2016; 최일진·남황우, 2015). 또한 같은 여건이라도 주민의 특성과 지역 상황에 따라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김상민·이성원, 2025; 정영아·김윤지, 2022), 경제적 요인의 효과가 지역사회 유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오정민·이상협, 2025). 이는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으로 전환되는 방식이 각 영역의 특성과 주민이 처한 비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이 일상에서 타 지역과 직접 견주게 되는 주거·생활, 교육·복지, 안전·방재, 소득·일자리 생활 인프라 여건을 중심으로 정주환경 인식을 구성함으로써, 격차 인식이 활성화되는 물질적 조건을 분석의 초점에 둔다.

3. 지역격차 인식

정주환경 인식이 지역 내부의 조건에 대한 평가라면, 지역격차 인식은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평가다. 지역격차(regional disparity)는 국가 전체적인 제도나 정책으로 산출된 편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른 지역 불평등으로 정의되며(소진광, 2020),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 문화, 교육, 주거, 자연환경 등 삶을 구성하는 다층적 차원의 공간적 불평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다(박준식·김영범, 2013; 조명래, 2011).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김영정, 2009), 최근에는 주민들이 지역격차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그 정서적 수용 수준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박준식·김영범, 2013; 김상민·이성원, 2025). 특히 다차원적인 생활여건 격차가 인구 이동과 수도권 집중을 통해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최근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어(강수진·서원석, 2025; 김현석·한석민, 2024), 격차 인식의 주관적 차원에 대한 탐구는 더욱 긴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지역격차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은 사회비교이론과 상대적 박탈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회비교이론은 개인이 어떤 대상을 준거로 선택하고 그 비교가

얼마나 현저해지는가에 집중하며(Festinger, 1954), 상대적 박탈 이론은 그 비교에서 확인된 열위가 단순한 인지에 그치지 않고 불리하거나 부당한 격차로 받아들여져 불만과 이탈 충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한다(Runciman, 1966). 지역 수준에서 이는 인접 도시 또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 열위 인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조명래, 2011). 다시 말해서, 정주환경의 절대적 수준이 충분히 양호하더라도 비교 준거 도시와의 격차 인식이 클 경우 이탈 결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Stark & Taylor, 1989).

이러한 추론은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지역격차를 더 크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를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일자리·교육·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된다(강수진·서원석, 2025; 박준식·김영범, 2013). 이러한 박탈감은 정주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격차 인식이 심화될수록 정주지속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김상민·이성원, 2025; 유나영·마강래, 2024). 다만 이들 연구는 격차 인식이 정주의식을 직접 낮추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격차 인식이 정주환경 인식의 효과를 조건화하는 상호작용까지 하나의 모형에서 검토한 사례는 드물다. 또한 기존 논의가 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거시적 격차 구도에 집중해 온 탓에, 창원·부산 등 대규모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김해와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형성되는 준거 비교의 맥락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두 공백은 모두 비교 준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다. 상대적 박탈의 핵심은 비교 준거의 설정에 있으며, 준거가 달라지면 박탈감의 성격과 강도도 달라진다(강수진·서원석, 2025). 특히 상대적 박탈은 개인이 자신의 처지를 준거와 비교해 느끼는 개인적 박탈(egoistic deprivation)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대적 위치를 준거 집단과 비교해 느끼는 집단적 박탈(fraternal deprivation)로 구분된다(강상준·양혜정, 2023; Lilly et al., 2024; Runciman, 1966). 지역격차 인식은 대체로 ‘우리 지역’을 준거 지역과 견주는 데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박탈에 가깝되, 준거가 생활권 내부로 좁혀질수록 개인이 체감하는 박탈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수준의 비교에서 준거가 되는 지역은 하나가 아니다.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준거를 지역격차 인식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묶으면 각 준거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가릴 수 있다. 이에 지역격차 인식은 준거의 공간적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격차 인식을 준거의 공간적 위계에 따라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국가 수준의 자원 배분 불평등에 대한 체감으로 제도적 불공정성 판단을 포함하며(박준식·김영범, 2013; 조명래, 2011), 인접 지역 간 격차는 창원·부산 등 일상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와의 직접적 비교에서 형성되는 즉각적 준거 비교를 반영한다(김상민·이성원, 2025; 소진광, 2020). 지역 내 격차는 같은 지역에 살아가면서 주민이 체감하는 자원·

기회 배분의 형평성과 상대적 여건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가까운 생활 반경 안에서 경험되는 불균등 인식이다(박준식·김영범, 2013; 소진광,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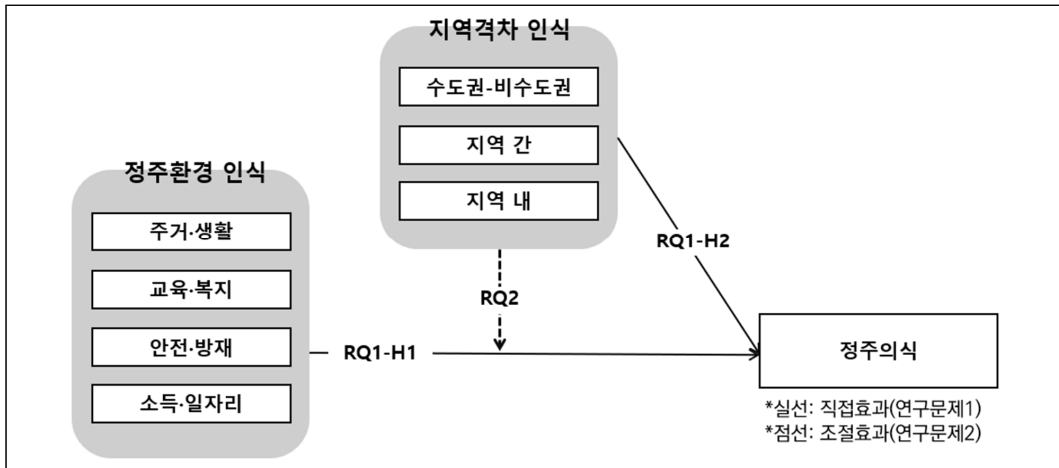
이처럼 지역격차 인식은 준거와의 비교에 따른 상대적 불균등 인식이라는 공통의 본질을 지니되, 준거 공간의 범위와 심리적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다. 준거가 멀수록 국가·제도 단위의 거시적 격차로 나타나고, 인접 도시로 좁혀질수록 일상의 직접 비교로 확인되며, 준거가 지역 내부로 좁혀지면 이웃과 자신을 견주는 개인적 박탈과 배분 형평성의 문제로 체감될 수 있다. 따라서 세 차원은 준거의 공간적 위계를 공유하되 서로 다른 인지 구조를 지니며, 정주환경 인식과 결합하여 정주의식에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해시민은 이 세 차원의 격차를 동시에 체감하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각 차원이 정주의식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과제다.

III. 연구설계

1. 분석 절차 및 가설설정

앞선 이론적 논의는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개인과 지역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격차 인식이 그 경로를 조건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38개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으로 구성 개념의 측정 구조를 확정한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 정주환경 인식, 지역격차 인식 세 차원을 순차 투입하여 각 변수군의 독립적 설명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서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한 격차 인식 차원을 조절변수로 지정하고,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PROCESS Macro(Model 1)로 탐색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종합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두 연구문제를 Hirschman(1970)의 이탈-충성 프레임에 따라 구체화한다. 먼저, 정주환경 인식은 심리적 결속을 강화하여 충성(Loyalty)을 유지시키는 인력(引力)으로(강영웅 외, 2020; 오정민·이상협, 2025; 이희창 외, 2004; Tiebout, 1956), 지역격차 인식은 상대적 박탈을 매개로 이탈(Exit) 충동을 자극하는 척력(斥力)으로 작용한다(박준식·김영범, 2013; 유나영·마강래, 2024). 이에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문제1. 정주환경 및 지역격차 인식은 각각 정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H1. 정주환경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주거·생활 환경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교육·복지 환경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안전·방재 환경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소득·일자리 환경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지역격차 인식은 정주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인식은 정주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지역 간 격차 인식은 정주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지역 내 격차 인식은 정주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격차 인식이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그 방향은 이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격차 인식이 이탈 충동을 강화하여 정주환경의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한다는 논의(박준식·김영범, 2013; 유나영·마강래, 2024)와, 충성이 이탈을 지연시키는 국면에서 격차가 오히려 재평가나 애착 강화로 이어진다는 논의(Hirschman, 1970; Bach & Smith, 1977)가 병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절효과를 별도의 가설로 확정하지 않고, 정주환경의 네 영역에 걸쳐 그 존재와 방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연구문제2. 지역격차 인식은 정주환경의 네 영역(주거·생활, 교육·복지, 안전·방재, 소득·일자리)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어떻게 조절하는가?

2. 측정도구

정주환경 인식은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주거·생활, 교육·복지, 안전·방재, 소득·일자리 네 영역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강영웅 외, 2020; 이미애·이승종, 2016; 이희창 외, 2004; Tiebout, 1956; An, Aoki & Suzuki, 2021).

지역격차 인식은 주민이 준거와의 비교를 통해 지각하는 상대적 불균등 인식으로, 공간적 위계에 따라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김상민·이성원, 2025; 박준식·김영범, 2013; 소진광, 2020; Festinger, 1954; Runciman, 1966).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와 인접 지역 간 격차는 지역 단위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만큼 주거·생활, 교육·문화, 생명·안전, 경제·일자리 네 영역 별 격차 및 경쟁력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이 가운데 인접 지역 간 격차는 김해와 생활권을 공유하되 위상이 다른 창원과 부산을 각각 준거로 측정하였다. 한편, 준거가 생활권 내부로 좁혀지는 지역 내 격차는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 향유, 상대적 여건, 배분 형평성에 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박준식·김영범, 2013; 소진광, 2020). 세 차원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 열위·불균등 인식이 큼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정주의식은 현 거주지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지속 거주 의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전반적 거주 만족과 지속 거주 의향 등에 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강영웅 외, 2020; 오정민·이상협, 2025; Lewicka, 2011).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성별, 연령, 소득 수준, 거주기간으로 설정하였다(이미애·이승종, 2016; 이희창 외, 2004).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토대로 연령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할당하였으며, 성별은 각각 50%로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조사는 2026년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유효표본 700부를 SPSS 29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분석에 앞서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주요 대상인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간 주요 변수의 인식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사전 검토하였으나, 정주환경 인식 및 지역격차 인식의 주요 변수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05$) 세대 구분 없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51.1%, 남성 48.9%로 균형을 이루며, 연령은 50대(26.4%), 40대(21.7%), 60대 이상(20.7%) 순으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55.8%로 과반을 넘으며, 거주지역은 동 지역이 85.6%, 읍·면지역이 14.4%로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가구소득은 200~400만원 미만(35.4%)이 가장 많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이 50.4%로 절반을 넘는다.

한편 응답자의 64.1%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 또는 ‘매우 높다’(8.6%)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일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이 비교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인식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Festinger, 1954). 이러한 비교 평가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개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여건을 다른 지역과 견주어 평가하는 지역 수준의 비교 인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비교의 준거는 개인 수준에서 지역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Runciman, 1966; Lilly

et al., 2024), 이를 반영한 개념이 바로 지역격차 인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격차 인식이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358	51.1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07	15.3
	남성	342	48.9		200~400만원 미만	248	35.4
연령	20대 이하	102	14.6		400~600만원 미만	207	29.5
	30대	116	16.6		600만원 이상	138	19.7
	40대	152	21.7	학력	중학교 이하	28	4.0
	50대	185	26.4		고등학교	200	28.6
	60대 이상	145	20.7		전문대학	119	17.0
혼인 상태	미혼	191	27.3		4년제 대학 이상	353	50.4
	기혼	451	64.5	직업	학생	41	5.9
	이혼 및 사별	58	8.3		전업주부	109	15.6
자녀	있음	473	67.6		임금근로자	394	56.2
	없음	227	32.4		특수고용직	13	1.9
거주 기간	1년 미만	44	6.3		자영업	68	9.7
	1년~5년 미만	123	17.6		무직 및 기타	75	10.7
	5년~10년 미만	143	20.4	사회 경제 지위 인식	매우 낮다	41	5.9
	10년~20년 미만	184	26.3		낮다	150	21.4
	20년 이상	206	29.5		보통이다	449	64.1
거주 지역	읍·면지역	101	14.4		높다	48	6.9
	동지역	599	85.6		매우 높다	12	1.7
전체		700	100	전체		700	100

2.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전체 38개 측정문항에 내재된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KMO 값은 .923,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17,220.136$, $p<.001$), 모든 요인적재량이 .5이상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10). 도출된 8개 요인은 측정문항의 내용에 따라 정주환경 인식 4개 요인(주거·생활, 교육·복지, 안전·방재, 소득·일자리), 지역격차 인식 3개 요인(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지역 간 격차, 지역 내 격차), 그리고 정주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이때 창원·부산을 각각 준거로 측정한 인접 지역

간 격차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 추출되어 단일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설계 단계에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정한 3개 범주 8개 차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 구조를 탐색적으로 지지한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3〉 참조), 정주환경의 네 요인은 모두 정주의식과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복지($r = .467, p < .01$)와 주거·생활($r = .464, p < .01$)이 정주의식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안전·방재($r = .438, p < .01$), 소득·일자리($r = .378, p < .01$) 역시 정주의식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정주의식이 단순한 지역애착이 아니라 주거, 복지, 안전, 일자리 등 지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정주환경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문항(38개)	적재량	신뢰 계수	고유값 (분산)	측정문항(38개)		적재량	신뢰 계수	고유값 (분산)		
생활편의시설	.662	.850	3.124 (8.220)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주거·생활	.885	.892	3.132 (8.243)		
교통시설	.565				교육·문화	.899				
공원녹지·거리청결도·소음	.700				생명·안전	.804				
상수도·전기·가스 설비	.785				경제·일자리	.848				
하수도·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738			.905	4.580 (12.052)	지역 간 격차 (김해-창원)	주거·생활	.755	.915	5.229 (13.759)
공교육(학교) 여건	.700	교육·문화	.773							
사교육(학원) 여건	.690	생명·안전	.745							
평생교육 프로그램	.736	경제·일자리	.717							
공공·문화체육시설	.709	지역 간 격차 (김해-부산)	주거·생활			.753	.713	2.009 (5.288)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739		교육·문화			.791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 시설	.619		생명·안전			.733				
돌봄 및 복지시설	.574		경제·일자리			.706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776	.872	2.620 (6.894)	지역 내 격차	혜택 향유	.727	.831	2.738 (7.205)		
사회재난(화재·붕괴·감염병 등)	.770				상대적 여건	.839				
범죄 및 치안	.689				배분 형평성	.783				
청년층 경제활동 기회 충분	.794	.878	3.002 (7.901)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	.786	.831	2.738 (7.205)			
중장년층 경제활동 기회 충분	.765			지속 거주 기대(1~2년)	.744					
질 좋은 일자리 충분	.763			지속 거주 기대(다음 세대)	.710					
소득수준·생활비 적절	.639			전반적으로 살기 좋음	.707					
KMO(Kaiser-Meyer-Olkin)				.923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17,220.136(df=703, p< .001)$						

추출방식: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회전방식: 배리맥스(Varimax)

한편, 격차 인식 변수들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 격차 인식은 평균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정주의식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 = -.071$, $p > .05$).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반면, 개인의 정주 결정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격차인식 요인 중 지역 간 격차 인식은 정주의식과 가장 강한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r = -.453$, $p < .01$), 소득·일자리($r = -.470$), 교육·복지($r = -.488$), 주거·생활($r = -.407$), 안전·방재($r = -.389$) 등 정주환경의 모든 요인과의 일관되게 유의한 부(-)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창원·부산 등 인접 도시와의 직접적인 비교에서 형성되는 격차 인식이 단순히 주관적 불만에 그치지 않고, 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복합적 평가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내 격차 인식 역시 정주의식과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였으나($r = -.180$, $p < .01$), 그 강도는 지역 간 격차 인식에 비해 낮았다. 이는 같은 지역주민 간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과 불공정 인식이 정주의식과 관련되기는 하나, 인접 도시와의 비교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방식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주거· 생활	교육· 복지	안전· 방재	소득· 일자리	수도권 격차	지역 간 격차	지역 내 격차	정주 의식
주거·생활	3.56	.673	1							
교육·복지	3.16	.669	.651**	1						
안전·방재	3.39	.684	.559**	.651**	1					
소득·일자리	2.77	.722	.409**	.607**	.463**	1				
수도권 격차	3.98	.765	-.075*	-.112**	-.058	-.263**	1			
지역 간 격차	3.14	.673	-.407**	-.488**	-.389**	-.470**	.185**	1		
지역 내 격차	2.84	.673	-.220**	-.167**	-.187**	-.127**	.059	.098**	1	
정주 의식	3.49	.649	.464**	.467**	.438**	.378**	-.071	-.453**	-.180**	1

주: 격차 인식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균등 수준을 더 크게 인식함을 의미함.

**Pearson 상관계수 $p < .01$, * $p < .05$, 양측 검정

3. 가설검증

1) 위계적 회귀분석

정주의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 1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설명력은 제한적이었다($R^2=.016$, $\Delta F=2.783$, $p<.05$). 이는 성별, 연령, 소득, 거주기간과 같은 개인 특성만으로는 정주의식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주환경 인식 4개 요인을 추가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R^2=.302$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모형 1 대비 설명력 증가도 유의하였다($\Delta R^2=.287$, $\Delta F=71.009$, $p<.001$). 이는 정주의식이 개인적 속성보다 지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주거, 생활,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 재생산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격차인식 3개 요인을 추가한 최종 모형 3에서는 설명력이 $R^2=.350$ 으로 증가하였고($\Delta R^2=.047$, $\Delta F=16.613$, $p<.001$),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역시 모든 독립변수의 VIF 값이 기준치인 10 미만을 충족하였다($1.030 \leq VIF \leq 2.730$).

최종 모형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거·생활($\beta=.190$, $p<.001$), 안전·방재($\beta=.134$, $p<.01$), 소득·일자리($\beta=.090$, $p<.05$) 인식이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주거·생활 환경의 표준화계수가 가장 커 생활편의 및 주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정주의식 형성의 핵심 조건임을 나타낸다. 반면 교육·복지 환경 인식은 모형 2에서 유의하였으나($\beta=.120$, $p<.05$), 격차 인식 변수 투입 후 유의성이 소멸되었다($\beta=.068$, $p>.05$). 교육·복지 인식은 정주의식과의 상관이 정주환경 네 요인 중 가장 높지만($r=.467$), 다른 정주환경 요인(주거·생활 $r=.651$, 안전·방재 $r=.651$) 및 지역 간 격차 인식($r=-.488$)과도 두루 높은 상관을 보인다. 모든 독립변수의 VIF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2.730)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으나, 이처럼 다른 변수들과 설명력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탓에 이들을 함께 투입한 모형 3에서는 교육·복지 인식의 고유한 설명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복지 여건에 대한 평가가 다른 정주환경 요인 및 인접 도시와의 비교 인식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격차 인식 변수 중에서는 지역 간 격차 인식만 정주의식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beta=-.253$, $p<.001$). 이는 인접 도시와 비교하여 김해의 생활기회와 지역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정주의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 간 격차 인식의 표준화계수는 최종 모형의 모든 예측변수 중 가장 커, 정주의식이 지역 내부 조건에 대한 절대평가뿐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 인식에 따라 강하게 조건화됨을 보여준다. 반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인식($\beta=.024$, $p=.465$)과 지역 내 격차 인식($\beta=-.060$, $p=.061$)은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준거의 공간적 위계 가운데 일상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도시와의 격차

만이 정주의식을 낮추고, 그보다 준거가 멀거나 가까운 두 차원은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비수도권 주민 사이에 널리 공유되는 인식이지만, 그 준거가 일상의 생활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개인의 정주 결정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격차 인식은 부(-)의 방향을 보였으나 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지역 내 부에서 체감하는 불균등이 인접 도시와의 비교만큼 지역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의 판단으로 뚜렷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그 경계값 수준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역 내 격차 인식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정교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4〉 정주의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구분	정주의식					
	모형1	모형2	모형3			
	$\beta(t)$	$\beta(t)$	B	SE	$\beta(t)$	VIF
(상수)	(25.513)	(6.944)	2.542	.286	(8.883)	
성별	.012(.306)	.067(2.082)*	.091	.041	.070(2.237)*	1.030
연령	-.032(-.842)	-.010(-.318)	-.011	.015	-.023(-.736)	1.075
소득	.026(.667)	.005(.147)	.003	.011	.009(.286)	1.061
거주기간	.120(3.168)**	.092(2.820)**	.045	.015	.091(2.906)**	1.048
주거·생활		.232(5.368)***	.184	.041	.190(4.467)***	1.919
교육·복지		.120(2.315)*	.066	.049	.068(1.345)	2.730
안전·방재		.157(3.603)***	.128	.040	.134(3.177)**	1.892
소득·일자리		.153(3.725)***	.081	.038	.090(2.148)*	1.868
수도권 격차			.020	.028	.024(.730)	1.123
지역 간 격차			-.244	.036	-.253(-6.787)***	1.467
지역 내 격차			-.059	.031	-.060(-1.878)	1.109
R ²	.016	.302	.350			
Adjusted R ²	.010	.294	.339			
Δ R ²	.016	.287***	.047***			
F(df)	2.783*(4,695)	37.456*** (8,691)	33.618*** (11,688)			
Δ F(df)	2.783*(4,695)	71.009*** (4,691)	16.613*** (3,688)			

주: 남성=1, 여성=2

***p<.001, **p<.01, *p<.05

통제변수 중 거주기간은 세 모형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beta=.091$, $p<.01$). 이는 거주기간이 긴 주민일수록 정주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그 배경에는 생활 기반과 관계망의 축적 등이 관련될 여지가 있다. 성별은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정주환경 및 지역격차 인식을 통제한 모형 3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나타나($\beta=.070$, $p<.05$; 남성=1·여성=2), 인식 수준을 통제한 조건에서는 여성의 정주의식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과 소득은 전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2) 조절효과 분석

앞선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공간적 위계의 세 층위 가운데 일상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도시와의 격차 인식만이 정주의식에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beta=-.253$, $p<.001$). 이는 인접 생활권이 수도권이나 지역 내부와 구별되는 독자적 준거로 작동함을 뒷받침한다. 이 준거를 구성하는 창원과 부산은 김해와의 관계에서 위상을 달리한다. 창원이 김해와 같은 경남권 기초자치단체인 반면, 부산은 광역시로서 행정적 위계와 도시 규모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회귀에서 통합했던 인접 도시 격차를 여기서 창원과 부산으로 나눈 것은, 사회비교의 현저성이 준거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Festinger, 1954)에서 두 도시가 서로 다른 준거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구분은 측정모형에서 확정되거나 사전에 이론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지역 간 격차 인식’ 내부를 위상 차이에 착안하여 사후적·탐색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표 5〉 지역 간 격차 인식의 조절효과

조절변수	독립변수	정주환경 인식	B	SE	t	p	결과	
							보정 전	보정 후
지역 간 격차 인식 (김해-창원)	주거·생활		.034	.036	.935	.350	비유의	비유의
	교육·복지		.067	.034	1.963	.050	비유의	비유의
	안전·방재		.031	.034	.907	.365	비유의	비유의
	소득·일자리		.074	.034	2.178	.030	유의(+)	비유의
지역 간 격차 인식 (김해-부산)	주거·생활		.039	.034	1.128	.260	비유의	비유의
	교육·복지		.045	.035	1.292	.197	비유의	비유의
	안전·방재		.028	.034	.809	.419	비유의	비유의
	소득·일자리		.021	.035	.604	.546	비유의	비유의

주1: B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통제변수는 성별·연령·소득·거주기간임.

주2: 창원·부산 신뢰도는 각각 $\alpha=.866$, $\alpha=.859$ 이며, 평균은 3.08(SD=0.69), 3.20(SD=0.7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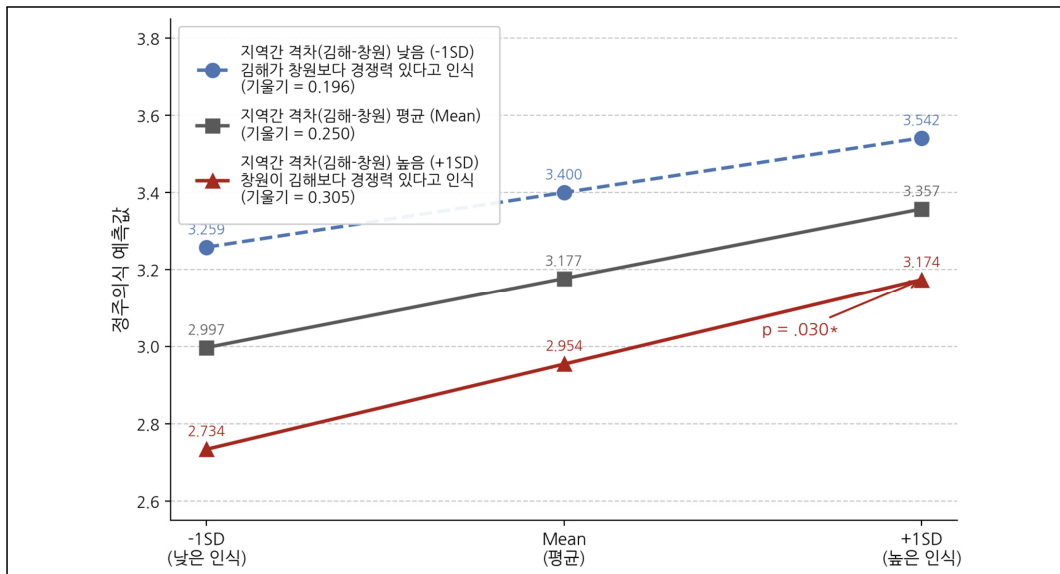
주3: 보정 후 판정은 Bonferroni 방법으로 조정한 유의수준($\alpha=.05/8=.006$)을 기준으로 함.

이에 총 8개 조합(4요인×2조절변수)에 대해 PROCESS Macro(Model 1)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격차 인식이 정주의식의 수준에 미치는 주효과와 달리, 정주환경 인식의 효

과가 준거 도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8개 조합 중 소득·일자리 환경 인식과 김해-창원 격차 인식의 조합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으며($B=.074$, $SE=.034$, $t=2.178$, $p=.030$, 95% CI [.007, .140], $\Delta R^2=.005$), 그 방향은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의 정(+)적 관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단순기울기를 보면, 소득·일자리 환경 인식의 정(+) 효과는 창원 대비 격차를 낮게 인식하는 집단(-1SD)에서 .196, 평균에서 .250, 높게 인식하는 집단(+1SD)에서 .305로, 격차가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강해졌다(〈그림 3〉 참조).

〈그림 3〉 소득·일자리 환경 × 지역 간 격차(김해-창원) 조절효과($p=.030^*$)



다만 이 결과는 정주환경 4개 영역과 준거 도시 2곳을 결합한 8개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에 서만 관측된 것이다. 이에 제1종 오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중검정 보정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듯 김해-창원 간 소득·일자리 상호작용의 유의성은 유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조절효과의 확증적 근거로 볼 수 없음을 전제하며, 후속 연구에서 재검토할 의미가 있는 탐색적 단서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그럼에도 이 결과가 부산이 아닌 창원 비교의 소득·일자리 영역에서 관측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비교의 현저성은 준거와의 거리나 규모보다 준거가 자신과 얼마나 유사하고 이동 가능하며 동일 생활권·노동시장에 속한다고 인식되는지, 즉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에 좌우된다(Festinger, 1954; Carling, 2024). 이 관점에서 창원은 김해와 같은 경남권에 속해 산업구조·통

근권의 유사성이 높은 반면, 부산은 광역시로서 산업구조와 생활권의 성격을 달리해 비교 준거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창원과 인접한 장유 등 김해 서부를 중심으로 통근 연계가 이루어지는 점은, 두 도시가 임금·일자리 여건을 직접 견주는 노동시장 생활권에 가까움을 시사한다. 실제로 김해와 창원은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각각 35.8%, 26.4%로 서비스업 중심의 부산 광역시(13.5%)를 크게 상회하는 제조업 특화 도시이며(통계청, 2025), 경상남도가 창원의 전기 장비 제조업과 김해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나의 정책 단위로 묶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등(김해연, 2026) 두 도시는 임금·일자리 여건이 직접 비교되는 노동시장 권역에 속한다. 다만 응답자가 창원·부산을 어느 정도 비교 준거로 인식하는지는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추론은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에 해당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주환경과 지역격차 인식이 정주의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고, 두 인식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제시한다.

1. 학술적 시사점

첫째, 주민의 이탈과 이를 억제하는 심리적 결속인 충성의 역학을 이론화한 Hirschman(1970)의 이탈-충성 프레임워크를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정주 맥락에 적용하였다. 지역 맥락에서 충성 성향에 근접하는 심리적 지표가 정주의식이며, 본 연구는 이를 연속 척도로 조작화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의식이 환경 조건과 격차 인식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였다. 이는 수도권·대도시 중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비수도권 중소도시 맥락에서의 정주 역학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지역격차 인식을 공간적 위계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인접한 지역 간 격차, 지역 내 격차로 세분화하는 측정틀을 제안하고, 차원별로 정주의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실증하였다. 이는 격차인식을 단일 변수로 처리해 온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간적 위계를 고려한 다차원 측정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특히 인접한 지역 간 격차인식이 정주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낮추는 직접 효과를 보인 것은, 외부 비교 준거가 강력할 때 심리적 결속이 쉽게 무너진다는 이론적 논리와 정확히 대응한다(Hirschman, 1970). 아무리 좋은 정주환경도 “우리 지역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라는 인식 앞에서는 정주의식을 충분히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환경 인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탐색적 단서를 제시하였다. 지역격차 인식은 정주의식의 수준 자체와는 부(-)적으로 관련되었으나, 소득·일자리 영역에서는 격차 인식이 클수록 그 효과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격차 인식이 정주환경 인식과 맺는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양상이 산업구조가 유사한 창원과의 비교에서 관찰되었다는 점은, 유사한 대상을 준거로 삼는다는 Festinger(1954)의 논리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8개 조합 중 하나에서만 관측되고 다중검정 보정 후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은 잠정적 결과이므로, 확증적 발견이 아니라 정주의식 연구와 지역격차 연구의 접점을 넓히는 후속 검토 과제로 제한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전입 초기 주민의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거주기간은 정주의식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beta=.091$, $p<.01$). 다만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이 결과만으로 거주기간의 증가가 정주의식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주의식이 높은 주민이 지역에 오래 남았을 가능성과, 정주의식이 낮은 주민이 이미 표본에서 이탈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입 초기 주민의 이탈 위험을 직접 입증한다기보다, 전입 이후 정주의식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종단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행 정책은 이 과정을 충분히 보지 못한다. 전입 가구 수를 성과로 삼는 지표는 순증만 확인할 뿐, 전입한 가구가 실제로 머무는지는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성과 측정의 기준을 전입 가구 수에서 전입 가구의 잔류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얼마나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들어온 이들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잔류율은 지원이 필요한 지점을 특정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책 수단이 된다. 예컨대, 전입 1년차 가구의 정착 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두고, 전출 가구의 사유를 조사해 정책에 환류하며, 잔류율을 인구 사업의 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치 실적 경쟁에서 정착 지원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출발점이다.

둘째, 교육·복지 환경에 대한 주민의 평가를 인접 도시와의 비교 인식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 환경 인식은 모형 2에서 정주의식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지역격차 인식을 추가한 모형 3에서는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모형 2: $\beta=.120$, $p<.05$; 모형 3: $\beta=.068$, $p>.05$). 교육·복지 환경 인식이 지역 간 격차 인식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

인 점($r=-.488$)을 고려하면, 두 변수가 정주의식과 관련되는 설명분산의 일부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육·복지 여건에 대한 평가가 인접 도시와의 비교와 어느 정도 맞물려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복지 여건의 개선이 정주의식 제고로 이어지려면,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이 창원·부산 대비 열위를 체감하는 격차 구조를 완화하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격차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민이 일상에서 크게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인접 도시와의 실질적 격차를 좁히는 투자다. 다만 인프라 확충은 장기간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여 단기간에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는 격차가 있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광역 대중교통 연계나 공공 도서관·문화시설·의료기관의 광역 이용 확대를 통해 창원·부산의 인프라를 김해 시민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접근 모두 개선된 여건이 주민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주의식 제고로 연결되므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지역사회 모니터링단 등 주민과 함께 격차 해소 과정을 설계할 때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다만 교육·복지 인식과 격차 인식의 관계가 매개인지 대체인지는 본 연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구조를 밝히는 추가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창원과의 소득·일자리 격차에 관한 정책 함의를 검토할 수 있다. 소득·일자리 인식과 김해-창원 격차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8개 조합 중 유일하게 유의하였으나($B=.074$, $p=.030$), 다중검정 보정 후에는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다만 격차를 크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소득·일자리 인식과 정주의식의 정(+)적 관련성이 다소 강해졌다. 이러한 양상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창원과의 비교에서 나타난 점은, 산업적으로 유사한 도시가 소득·일자리 영역의 비교 준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전제로,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광역 균형발전이라는 거시 담론에 머물기보다 실질적 경쟁력 격차를 준거로 삼는 미시적 접근을 함께 검토할 필요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김해의 일자리 정책을 설계할 때 일자리 수뿐 아니라 인접 노동시장과 비교되는 임금, 고용안정성 및 직무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 나아가 장기적으로 창원을 경쟁 대상이 아니라 광역 협력의 파트너로 바라보고 산업 분업이나 광역 고용권 연계를 모색하는 방안 등이 격차 인식 완화와 정주의식 제고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단일 조합에서 관측된 잠정적 결과인 만큼, 그러한 준거 비교가 실제로 정주의식으로 이어지는지는 후속 연구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주환경 및 지역격차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주효과와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두 요인이 단순 경쟁만이 아닌 상보적 관계로 작동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는 격차를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나아가,

지방분권 시대 지역정주 정책 개입의 지점과 대상을 설정할 근거를 제공한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이를 후속 연구의 과제로 제안한다. 첫째, 표본의 거주지 구성이 읍·면 거주자의 정주 경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할당 표집을 적용하고 거주지 유형은 할당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표본 구성은 김해시 실제 인구 분포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김해시 2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동 지역 82.0%, 읍·면 지역 18.0%로 집중되어 있어(국가통계포털, 2026), 표본의 동 지역 비율 85.6%는 모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읍·면 인구의 절대 규모가 작아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읍·면 표본을 보강한 설계를 통해 거주지 유형별 정주의식의 차이를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김해시 단일 지역 횡단면 분석의 특성상 인과적 추론에 한계가 있다. 인과적 경로의 규명은 종단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로, 결과의 외적 타당성은 분권 수준이 상이한 복수 지역을 비교하는 연구설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탈-충성 프레임에 집중한 까닭에, 이탈과 충성 사이의 제3의 경로인 발언, 즉 주민의 지역 내 참여와 변화 요구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포함한 통합적 검증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상준·양혜정. (2023). 청년세대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7(5): 949-980. doi: 10.22718/kg.2023.7.5.037
- 강수진·서원석. (2025). 청년의 지방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박탈감 요인: 지방 거주 경험별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2): 63-80. doi: 10.22885/KRDA.2025.37.2.63
- 강영웅·이승중·이혜림. (2020). 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정보』, 54(3): 107-140. doi: 10.18333/KPAR.54.3.107
- 강혜자. (2016).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두 과정에 관한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445-452. doi: 10.14400/JDC.2016.14.3.445
- 관계부처합동. (2024. 8. 21).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 국가통계포털. (2026). 행정구역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
- 국립국어원. (2025. 12. 31.).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김민석·강민규. (2023).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유출 영향 요인 분석. 『도시행정정보』, 36(2): 47-66. doi: 10.36700/KRUMA.2023.6.36.2.47
- 김상민·이성원. (2025). 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39(2): 159-198. doi: 10.22783/krila.2025.39.2.159
- 김영정. (2009). 한국의 지역불균등: 1960-2005년. 『지역사회학』, 11(1): 5-40.
- 김해연. (2026. 5. 25). 창원·김해·양산 제조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2573031>
- 김현석·한석민. (2024). 「지역불평등 양상과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박준식·김영범. (2013). 지역격차 문제의 인식 지형과 변화의 전망: 영호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균열로. 『지역사회학』, 14(2): 83-103.
- 소진광. (2020).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1): 3-48. doi: 10.22783/krila.2020.34.1.3
- 오정민·이상협. (2025).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 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9(4): 217-244. doi: 10.22783/krila.2025.39.4.217
- 우영옥. (2023). 외국인주민의 정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취업자(E7, E9, H2)와 유학생 중심으로. 『한국이민행정학회지』, 2(1): 23-49.
- 유나영·마강래. (2024). 비수도권 광역시 청년인구의 지역 간 이동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6(2): 1-22. doi: 10.22885/KRDA.2024.36.2.1

-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Kee 6자본 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
-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4.
- 정영아·김윤지. (2022). 지방정부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거주기간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331-358. doi: 10.18333/KPAR.56.2.331
- 조명래. (2011).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월간 복지동향」, 157: 4-9.
- 진금주. (2022). 귀어귀촌 현황과 지원정책 및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연구」, 34(2): 117-135.
-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3): 1-30.
- 통계청. (2025).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 한국은행. (2023).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
- 행정안전부. (2025. 12. 31.).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도자료.
- Amerigo, M., & Aragones, J. I. (1997).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7(1): 47-57.
- An, S., Aoki, T., & Suzuki, A. (2021). Why people settle in shrinking communities: A unified framework of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cognitive factors. *Sustainability*, 13(24): 13944. <https://doi.org/10.3390/su132413944>
- Bach, R. L., & Smith, J. (1977). Community satisfaction, expectations of moving, and migration. *Demography*, 14(2): 147-167.
- Carling, J. (2024). Why do people migrate? Fresh takes on the foundational question of migration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8(4): 1757-1791.
- Chen, N., Hall, C. M., Yu, K., & Qian, C. (2019). Environmental satisfac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place attachment: The cases of long-term residents in rural and urban areas in China. *Sustainability*, 11(22): 6439.
- Clark, W. R., Golder, M., & Golder, S. N. (2017). The British Academy Brian Barry prize essay: An exit, voice and loyalty model of politic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4): 719-748.
- El Anshasy, A. A., Shamsuddin, M., & Katsaiti, M. S. (2022). Proximity-Sensitive Relative Depriv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ntions. *Migration Letters*, 19(6): 833-841.

- Farrell, D. (1983).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as responses to job dissatisfaction: A multidimensional scaling stud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596-607.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 Pearson.
-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H., Salemink, K., & Haartsen, T. (2023). Beyond the (im)mobility and social-environmental dichotomy: Young adults' motives to reside in rural northwest Europe. *Population, Space and Place*, 29(4): e32.
- Lewicka, M. (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207-230.
- Lilly, K. J., Sibley, C. G., & Osborne, D. (2024). Status-based asymmetries in relative depriv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5(4): 407-420.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century England*. Routledge & Kegan Paul.
- Rusbult, C. E., Farrell, D., Rogers, G., & Mainous, A. G. III. (1988). Impact of exchange variables on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An integrative model of responses to declining job satisf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3): 599-627.
- Stark, O., & Taylor, J. E. (1989). Relative depriv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Demography*, 26(1): 1-14.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오 정 만: 부산대학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논문명: 지방정부의 관광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관광정책, 지방행정, 지역정주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2025)”, “의료관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융합관광콘텐츠연구, 2025), “도시재생 기반 관광 공간의 확산요인 분석: 정책확산이론을 중심으로”(관광학연구, 2023) 등이 있다(jmoh75@inje.ac.kr).

이 상 협: 2014년 영국 York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논문명: How Institutions Matter: Analysis of Restructuring the Employment System in South Korea)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치경제학이며 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및 지역 거버넌스가 관심분야다. 최근 논문으로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담론의 정치경제: 탈정치화와 학습의 물신화”(21세기정치학회, 2025), “한국 투표용지 디자인에 관한 실험 연구 -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디자인융복합연구, 2018), “Old Boys or New kids in Town? Th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n Welfare Reforms”(Asian Studies Review, 2017) 등이 있다(ezr91@inje.ac.kr).